

행사순서

13:30~14:00 접수·등록

14:00~14:05 내외빈 소개

■ 인사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
- 한국노총 공공연맹 이인상 위원장

14:05~14:30

- 한국노총 금융노조 허 권 위원장
 - 한국노총 공공노련 박해철 위원장
 -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 기획재정부 조규홍 차관보
-

■ 좌장

- 임상훈(한양대학교 교수)

■ 발제

14:30~15:00

1. 한국사회, 왜 사회연대가 중요한가
 - 이영수(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2. 공익재단의 설립 추진 의미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 이정희(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 지정토론(각 8“)

15:10~15:40

- 한창규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 집행위원장)
 - 류경희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
 -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15:40~16:10 ■ 종합토론

자료순서

■ 발제문

한국사회, 왜 사회연대가 중요한가	7
이영수(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공익재단 설립 추진 의미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21
이정희(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론문

한창규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대위 집행위원장)	47
류경희(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	51
오건호(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53

발제문 1



“한국사회, 왜 사회연대가 중요한가”

－ 사회연대를 위한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역할과 과제 －

이영수(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1. 양극화된 한국사회

▪ 기업소득은 갈수록 증가. 가계소득은 감소 : 기업편향적 분배

• GNI대비 기업소득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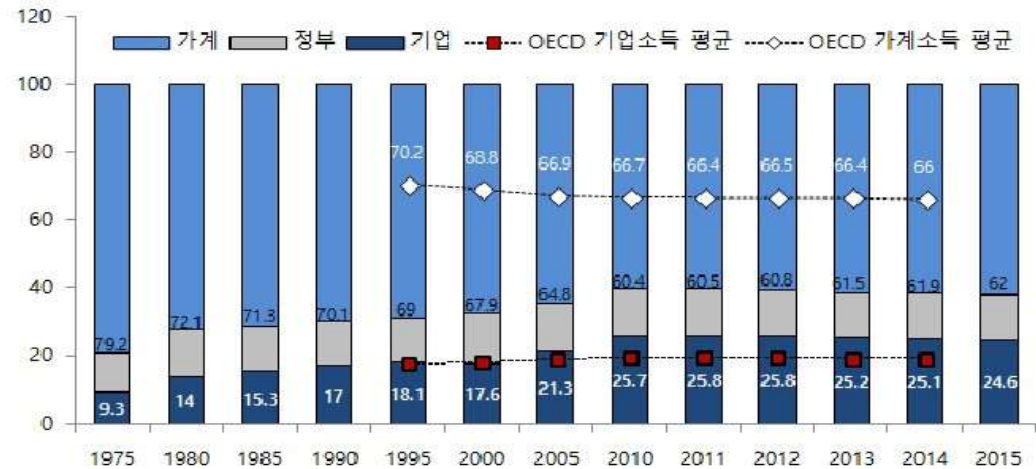
('80) 14.0% → ('90) 17% → ('00) 17.6% → ('05) 25.7% → ('15) 24.6%

• GNI대비 가계소득 비중

('80) 72.1% → ('90) 70.1% → ('00) 67.9% → ('05) 64.8% → ('15) 62.0%

※ OECD 국가 평균(20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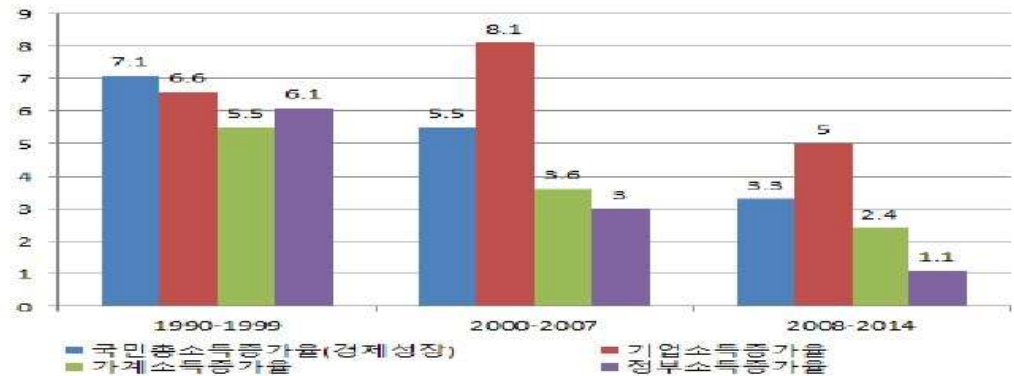
: 기업소득 18.9%, 가계소득 66%



* 출처 : 한국은행 및 OECD 평균(20개국 기준) 각 연도, 이재훈(2017) 재인용

- 2000년대 이후 가계소득과 국민총소득 증가율은 낮아지고 있음.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보면,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내에서도
격차 발생



* 출처 : 한국은행, 장하성(2015) 재인용

1. 양극화된 한국사회

▪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심화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심화

- 매출액 상위 10% 대기업 → 전체 매출액의 85.2% 차지.
- 자산총액 상위 10% 대기업 → 전체 자산의 89.5% 차지

• 특히 기업규모 및 고용형태 등에 따른 노동자 간 내부 격차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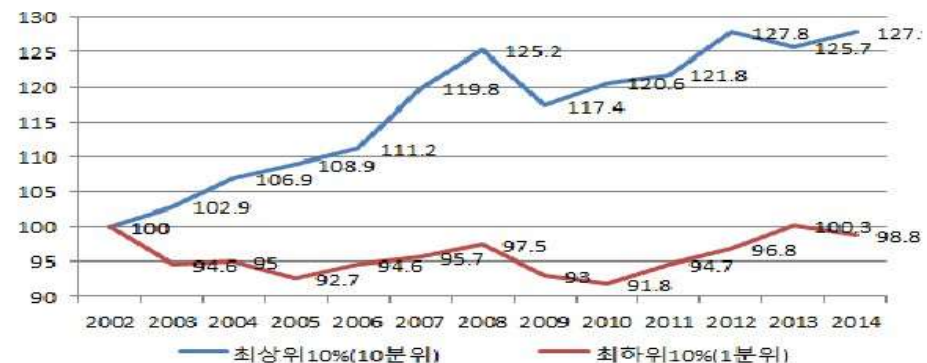
- (기업규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300인 이상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비중> : '80년 91.9%.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확대되어 '15년 70.9% 수준까지 낮아짐.

- (고용형태) 비정규직 임금비율은 정규직 대비 55.8%. 근속연수도 2.5년으로 낮음. 사회보험 가입률도 30% 수준.

- 소득 상위 10% 노동자의 실직노동소득 '02~'14년 동안 27.9% 증가.
- 반면, 하위 10% 노동자는 동기간 오히려 1.2% 감소



*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이재훈(2017) 재인용



*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장하성(2015) 재인용

1. 양극화된 한국사회

▪ 대·중소기업과 공공기관, 그리고 공공기관 간의 격차

- 대·중소기업과 공공기관 간 임금 격차
 - 공공기관 대비 중소기업 평균보수 52.5% 수준
 - 공공기관 대비 대기업 평균 보수 86.7% 수준
 - 전체 상용노동자 평균 보수 52.0% 수준

→ 전체적인 민간부문의 노동소득 분배구조
악화에 따른 상대적 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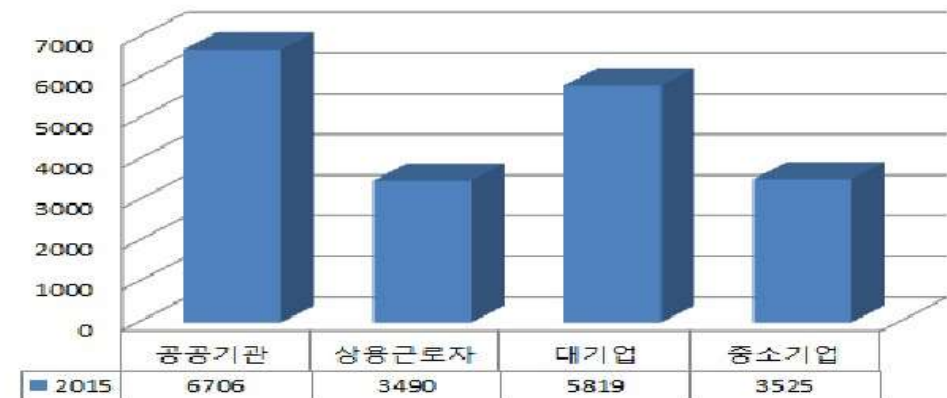
• 공공기관 간에도 격차 발생

<기관유형별 임금(2015년 기준)>

- 시장형 공기업
 - : (정규직) 77,195천원 (비정규직) 54,545천원
- 준시장형공기업
 - : (정규직) 73,788천원 (비정규직) 41,090천원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 (정규직) 73,180천원, (비정규직) 34,809천원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 (정규직) 62,303천원 (비정규직) 37,788천원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규모('15년 기준)>

- 무기계약직 22,069명(5.4%)
- 기간제 비정규직 41,729명(10.1%)
- 파견 용역 사내하도급 등 75,307명(18.3%)



* 출처 : 국회예산처(2016), e-나라지표



* 출처 : 국회예산처(2016)

2.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 원인 : 시장중심의 신자유주의 정책

▪ 시장 중심의 신자유주의 성장전략의 한계

- 빈곤과 소득불평등 심화 → 국제적 현상(오히려 한국은 더욱 심각)
 - OECD 평균 '80년대 소득상위 10%와 하위 10% 간 격차 7배 → '13년 9.6배(한국은 10.1배)
 - OECD 평균 '80년대 중반 상대빈곤율 8.5% → '13년 11.3%(한국은 14.6%)
 - OECD, IMF와 같은 국제금융기구조차 성장중심 발전전략으로 소득불평등, 빈곤 심화. 오히려 지속성장을 가로막는다고 인정.
 - OECD(2015) : 소득불평등 확대가 장기적으로 성장에 제동역할. 지니계수 3%p 증가 → 성장률 8.5%하락
 - IMF(2014) : 상위 20% 소득 1%p 증가 → 경제성장률 0.08% 감소.
- 낙수효과는 없었다. 성장과실이 편중됐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이 오히려 성장을 저해한다.
→ 기존 성장과 효율,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재성찰과 비판적 평가

※ ILO(2012)의 '임금주도성장론(이윤주도 vs 임금주도, 친자본 vs 친노동)' 역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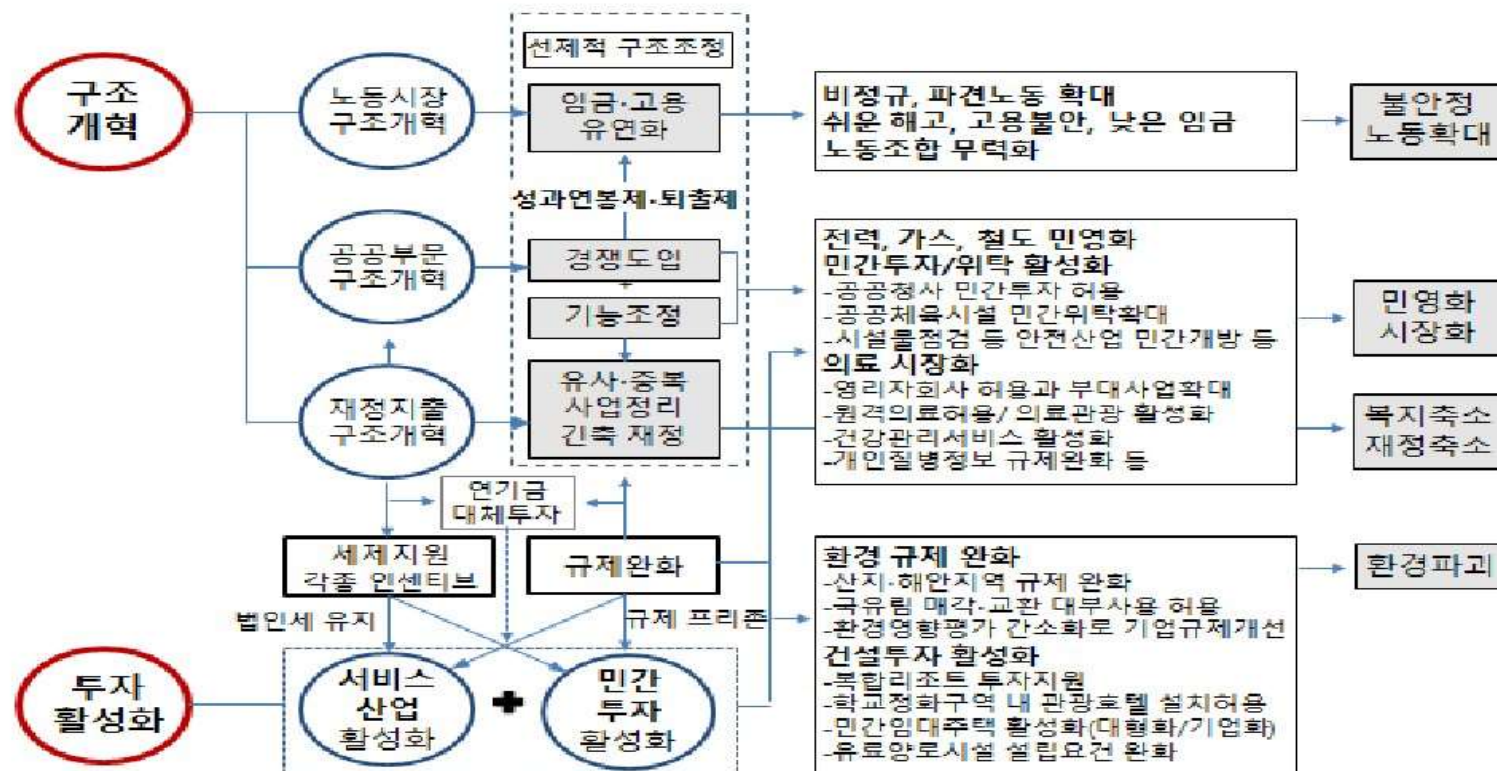
▪ 한국의 정책방향 : 친자본, 이윤주도 성장전략의 확대(개발독재체제 → 신자유주의 체제)

- 노동시장 유연화와 공공부문 시장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 지속 추진
 - 결과적으로, 저임금, 비정규노동의 확산, 고용불안정 증대, 임금과 소득불평등의 심화

2.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 원인 : 시장중심의 신자유주의 정책

■ 박근혜 정부 : 전형적인 <이윤주도 친자본 정책> 추진

-노동시장 구조개혁 + 공공부문 구조개혁(국정 최우선 과제) + 재정지출 구조개혁
→ 성과연봉제 역시 단순한 임금체계 개편이 아닌 공공부문 구조개혁 일환으로 추진



* 출처 : 이재훈(2017)

3.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 : '시장'과 '효율성' → '공공성'으로의 전환?

▪ 시장과 효율성 중심 → '공공성' 중심으로 전환?

<공공부문 관련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과 과제>

1)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충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해소 + 공공서비스의 확충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구성 → 양대노총 참여

2) 사회적 가치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 “인권, 안전, 환경 및 양질의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가 적극 실현되도록 공공기관 운영”

- ① 노사합의 없는 성과연봉제 2017년 중 폐지.
- ② 공공기관 평가체계 : 고용친화적 평가실현('17년 경영평가편람 수정). '19년부터 사회적 가치 반영
- ③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 18년부터 공공기관 감사의 독립성 강화 및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
- ④ 공공기관 공시제공정보 대폭 확대, 국민참여마당 신설 등

▪ 공공부문의 민주적 재편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

- 노정교섭 보장 및 제도화 : '좋은 일자리'(decent work)는 단순히 일자리나 고용정책을 넘어, 고용, 노동권, 사회보장, 사회적 대화(교섭)을 포괄하는 개념 → 노정교섭 제도화를 통해 모범적인 노사관계 선도.
- 민영화 중단 및 재공영화(공공서비스 기본법 제정 등)
-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력 증대 및 예산 확충
-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 및 공공성 강화(공운법 개정 및 공운위 개선 등)

4.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역할과 과제 : 왜 사회연대가 필요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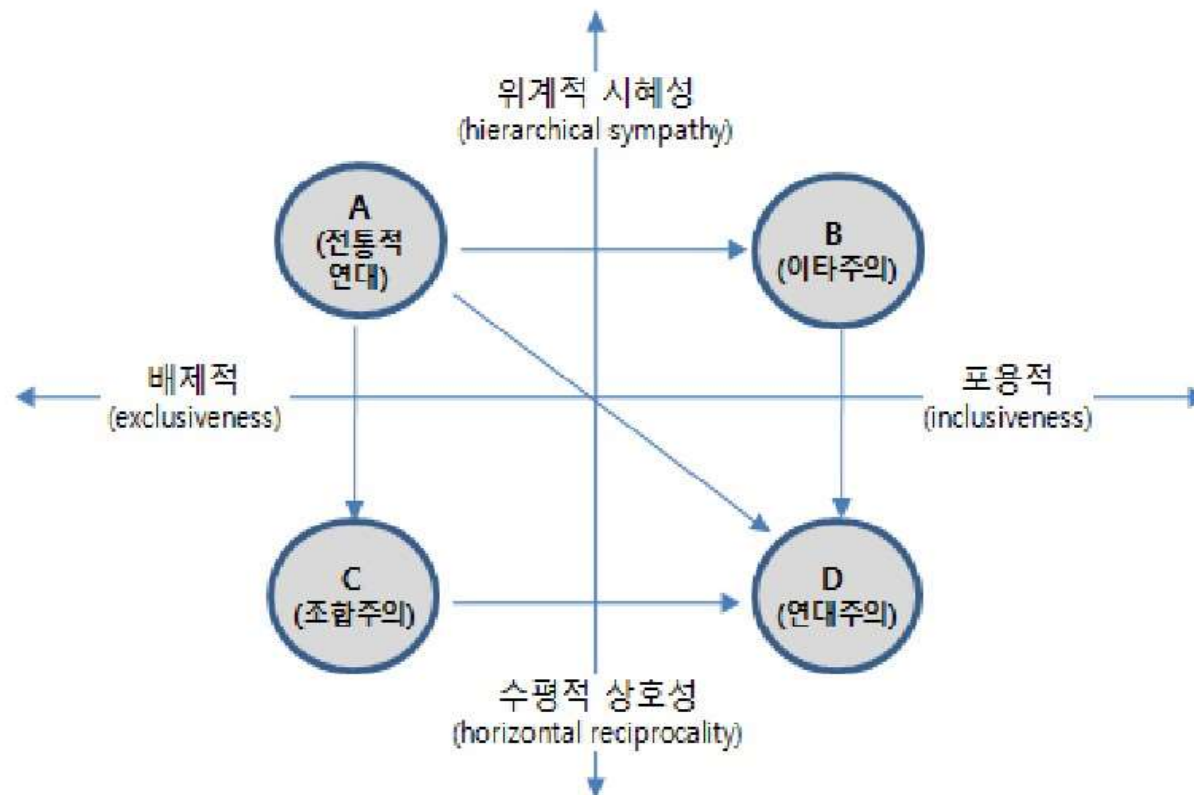
▪ 사회연대?

사회연대는 노동운동의 고립과 왜곡을 돌파하기 위한 대응 차원을 넘어, 새로운 운동적 전망을 만들어가기 위한 가치지향적, 실천적 개념

- 1998년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확산 : 비정규직과 불안정노동 확산
 - '조직된 정규직 노동' : 혹독한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경험하며 위축. 비정규 노동자의 투쟁에 대해 방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 때로는 격한 갈등 양상 → 전통적인 계급 내 연대의 균열
 - 차별적 이중노동시장 형성(보수정부와 자본의 전략적 활용).
 - '정규직 이기주의', '귀족노조', '철밥통' 등의 여론몰이 공세와 따가운 사회적 시선.
 - 노동운동의 위기는 곧 '연대성'의 위기.
 - 사회연대는 계급대표성과 사회적 지지 회복, 노동운동의 가치복원을 위한 전략적 지향
 - 사회연대 : 기존 '연대'의 개념과 방식의 확장
 - 동원 중심의 투쟁연대 → 참여 중심의 가치연대
 - 상층·단체 중심의 연대 → 조합원 자발적 참여확대
 - 조합원만의 임·단협 → 보다 다양한 사회의제 포괄
 - 단기적 이익 → 중장기적 전망과 비전 공유
 - 일방적 시혜나 자선, 연민. 일회성 봉사 → 수평적인 공동이 일상적 실천
- 노동운동의 고립을 극복하고 재활성화와 혁신을 위한 전략적 재조직화 과정. 노조-조합원간(내부), 노조-지역사회간(외부) 사회적 관계의 재정립 및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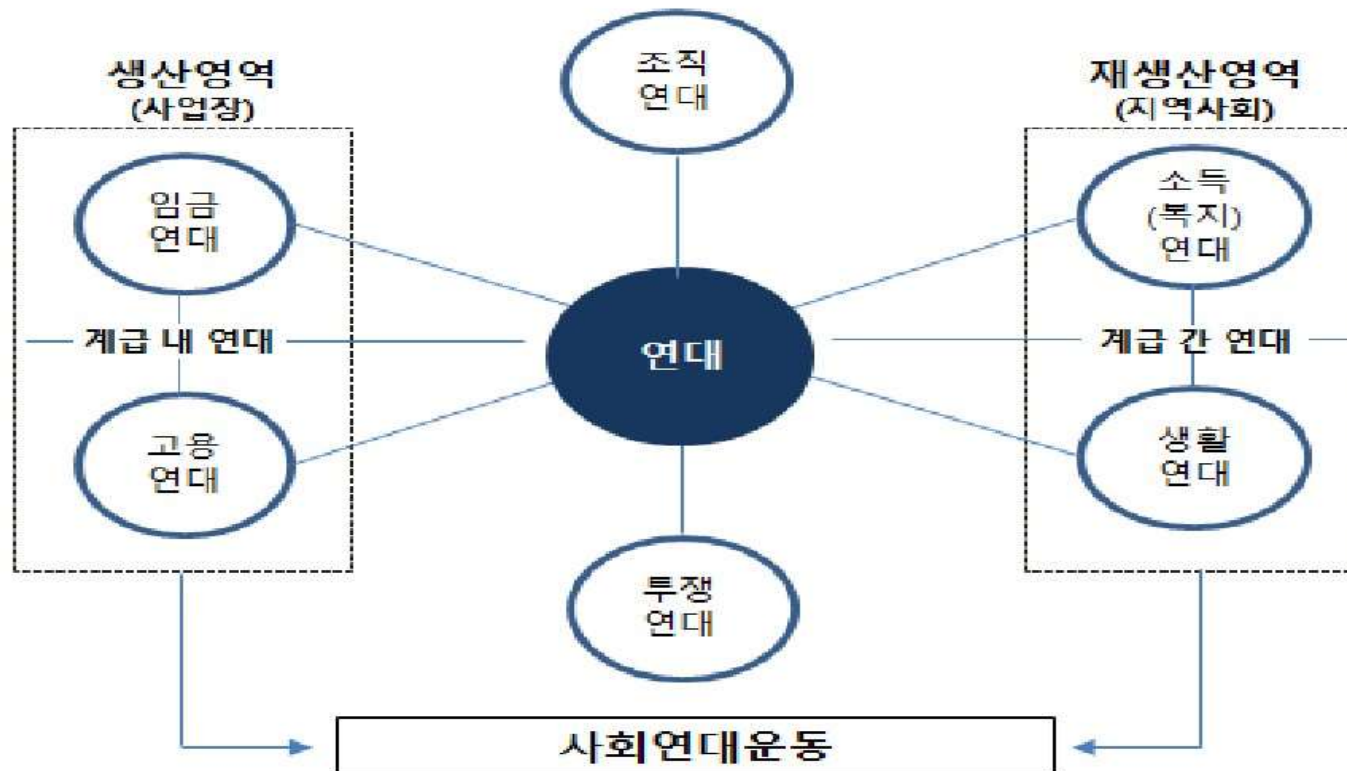
4.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역할과 과제 : 왜 사회연대가 필요한가

- 사회연대? 조합주의를 넘어 연대주의로!



4.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역할과 과제 : 왜 사회연대가 필요한가

- 사회연대? 안에서 밖으로, 위에서 아래로



* 출처 : 이재훈, 손우정, 이영수(2017)

4.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역할과 과제 : 왜 사회연대가 필요한가

■ 응집성과 배태성의 공간에서 국가와 노조의 전략적 행동

		배태성 : 노조의 시민사회(시민운동 및 지식인 사회)와의 연계	
		약함	강함
응집성 노조의 집권정당과의 연계	약함	노조 : 국가와 시민사회 둘 다에 크게 기대하지도, 의지하지도 않음. 국가 : 장기적으로 노조에 양보할 필요 못 느끼. 노조와의 충돌 혹은 선거패배에 대한 공포 없음. → 배타적 갈등 게임 결과 : 국가의 강한 반노동 탄압 (혹은 신자유주의 시장개혁)과 노조의 강한 저항 예) 한국의 1987년 노동자대투쟁	노조 : 시민사회와의 강한 연계. 하지만 국가와의 연계 없음. 국가로부터 장기적 기대 없음 국가 : 장기적으로 양보할 필요 못 느끼나 노조와의 극단적 충돌 혹은 선거패배에 대한 우려 존재함 → 노조우위 게임결과 : 국가의 강한 반노동 탄압(혹은 신자유주의적 시장개혁과 노조의 강한 저항) → 이후 결과적으로 국가의 (부분적)양보 예) 한국의 1996-1997 노동법 대투쟁
	강함	노조 : 집권정당에 강한 충성. 하지만 시민사회와의 연계는 부족. 국가로부터 장기적 보상기대. 국가 : 장기적 보상필요 못 느끼. 노조와의 충돌로 인한 정당성 상실 및 선거패배에 대한 우려 없음 → 국가우위 게임 결과 : 신자유주의적 시장개혁과 노조의 순응 예) 아르헨티나 메넴 정부 시장개혁	노조 : 집권정당에 강한 충성. 시민사회와의 강한 연계. 국가로부터 장기적 보상 기대. 국가 : 장기적 보상필요. 노조와의 충돌로 인한 정당성 상실 및 선거패배에 대한 강한 두려움 → 상호 신뢰 게임 결과 : 국가의 점진적 혹은 타협적 개혁과 노조의 협조/순응 예) 브라질 PT당의 점진개혁

* 출처 : 이철승(2016)

4.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역할과 과제 : 왜 사회연대가 필요한가

▪ 사회연대를 위한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역할

1) 공공부문의 임금, 고용, 복지 등 다양한 차별해소를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

-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근로세대와 예비근로세대간 : 갈등이 아닌 연대, 경쟁이 아닌 협력.
- 비정규직 정규직화+청년과 여성의 좋은 일자리 확충
 - 노동시간단축, 교대제개편, 기준인건비 개선, 임금격차해소를 위한 정액임금인상, 중층적 노정교섭 제도화, 공공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방식의 수단 동원.
- 노동조합 가입 확대를 통한 권리보장
- 사업장 내 정서적 공감대 형성 및 위화감 해소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사업 강화

2) 공공서비스의 파수꾼, 대변인 역할 강화

- 공공서비스의 확대 강화를 위한 사회적 역할 수행
- 시민사회와의 연대
 -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사회적 신뢰 및 발언력 강화

3) 지역에서의 사회적 실천 강화

-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내 사회적 역할 강화
- 노동조합(조합원)과 지역 간 사회적 관계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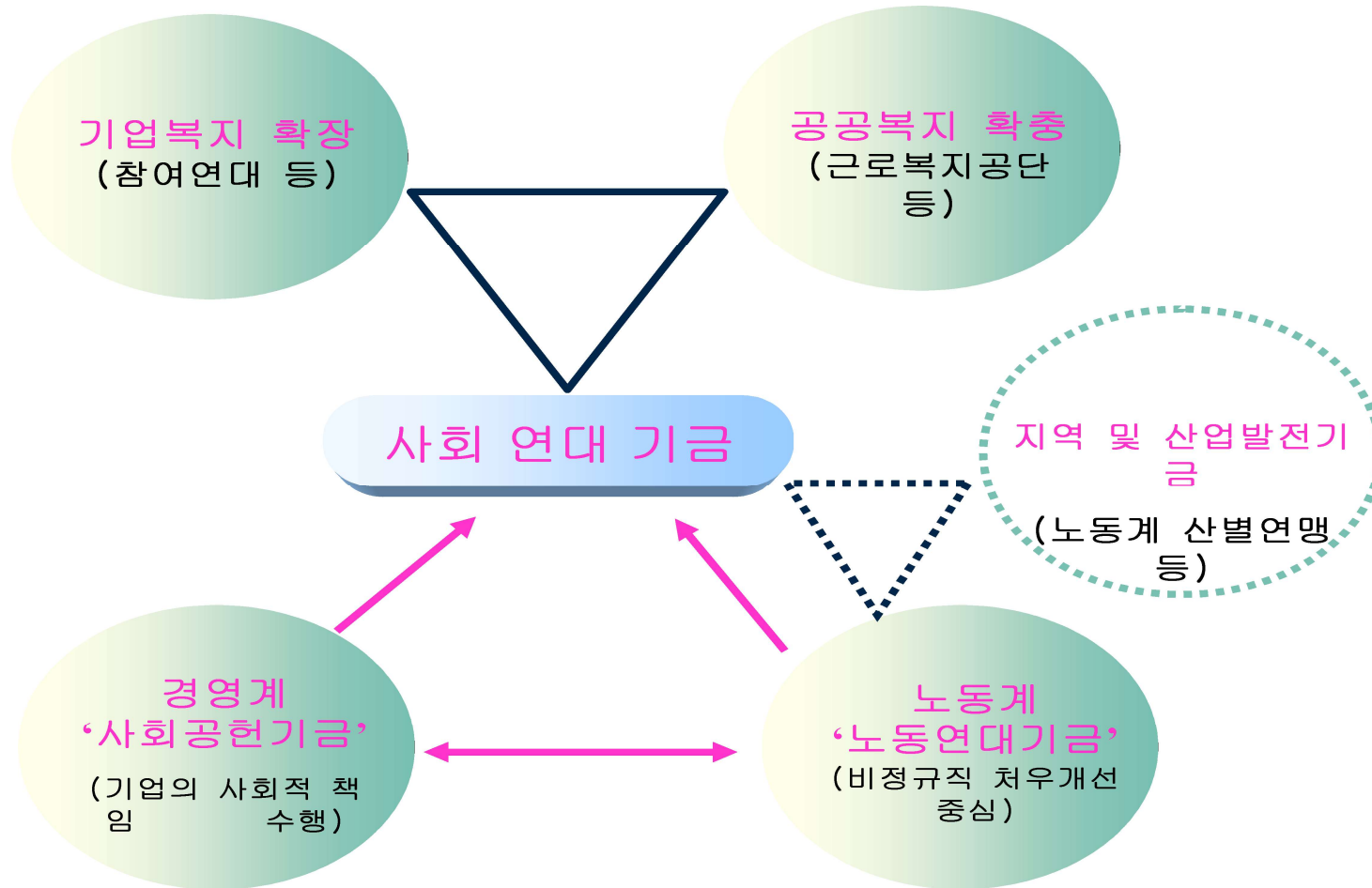
발제문 2



“공익재단 설립 추진 의미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이정희(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사회연대기금



자료: 조성재 외(2004)

연대기금 논의 역사

○ 2004년 민주노총 및 산하 산별연맹, 단체교섭 의제로 제안

- 정규직-비정규직 간, 기업규모 간 근로조건 격차 완화 위한 '연대기금' 조성 제안
- 경영계 반대: 기존의 사회공헌활동, 별도 연대방안 부적절, 준조세 부담 가중 우려
- 일부 사업장 노사 사회연대기금 합의, 그러나 사회적 파급효과 미약

○ 2007년 보건의료노조 '아름다운 합의'

- 총 323억 비용으로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 차별시정·처우개선 혜택 부여

기금 활용	인원	비고
직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67개 병원 2,384명	총 5,543명의 비정규직 이 차별시정과 처우개선 혜택
직접고용 비정규직 차별시정	42개 병원 1,541명	
비정규직 처우개선	51개 병원 2,717명	
간접고용 처우개선 (병원 진료비 감면, 명절수당 신설 등)	11개 병원 1,285명	

비고: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91% 찬성률로 통과됨

○ 2012년 노동계 사회연대기금 조성 제안

- 금속노조 집단교섭 요구안: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공헌기금 조성 채택
- 산업별 또는 기업별 노사 공동기금 조성 ⇒ 하청업체나 비정규직 지원
- 경영계 등의 반발로 진전되지 못함

○ 2017년 새로운 양상

- 공공부문공대위, 성과연봉제 도입 철회 관련, 인센티브(최대 1,600억원)를 비정규직 처우개선,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등 좋은 일자리 창출에 쓸 것을 제안
- 보건의료노조, 정규직 임금인상분의 일부를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 사용키로 결의함(주요요구: 인력확충, 비정규직 정규직화, 시간외근무 줄이기와 실노동시간 단축 등)
- 금속노조, 노사가 각각 출연하여 사회연대기금 또는 일자리연대기금 조성 통해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에 사용할 것을 제안함



1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에 대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성과연봉제 폐기에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가 준 ‘당근’ 1600억 환수해 일자리에 썰라”

양대 노총 ‘공대위’ 기자회견

만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연봉제 폐기는 양대 노총과 정부가 수차례 합의해 이뤄진 것으로, 지난해 발생한 극심한 노·정 갈등을 마무리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아울러 “성과연봉제 도입 인센티브”를 공익 목

적에 사용하는 방안과 공공부문 임금제도 개편 논의도 가능하다고 밝히 사회적 대타협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공대위는 정부가 “당근”으로 나눠준 “성과연봉제 도입 인센티브” 1600억원도 다시 갇혀가라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1600억원을 정부가 전액 환수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활용방안을 노사정이 함께 7월까지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들은 또 노·정 간 신뢰가 바탕이 된다면 “공공부문 임금제도 개편”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윤섭 일자리위원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거대 노조가 조합원의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청년고용에 앞장서겠다고 나섰다”면서 “노조의 결단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썼다.

공대위는 또 “정부 관계자의 진정성 있는 반성이 있어야 하며 불법 탄압에 앞장서왔던 낙하산 기관장들은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 강행 과정에서 노·정 간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공공부문 노조들은 68일간 기획재정부 앞에서 노숙투쟁을 벌였으며 철도노조 파업은 ‘역대 최장기’ 기록을 세웠다.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의결 “성과급 1600억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기재부, 기관 평가에도 적용 안해
노조 “전액 반납…비정규직 위해”
국정기획위 “사회적 대타협 출발”

정부가 공공기관들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도록 했던 지침을 철회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최대 1600억원)를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쓰기 위한 노사정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의결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따라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무리하게 확대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고, 직무성과급제 등 기관마다 자율적으로 보수체계를 합리화하자는 취지다.

이날 확정된 후속조치를 보면, 기존 권고안이 강제해온 성과연봉제 도입의 이행기간을 없애고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임금체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관련 취업규칙을

재개정하고, 노사 합의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곳은 유지 또는 변경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총인건비 동결 등 성과연봉제 도입 미이행 기관에 부여했던 벌칙을 모두 무효화했다. 조기 이행 기관에 인센티브로 지급된 성과급도 노사 협의를 통해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기재부는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도 애초 평가기준으로 제시했던 성과연봉제 관련 평가 항목을 모두 제외했다고 밝혔다.

기관별로 반납할 인센티브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노사정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박근혜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강행하기 위해 지급한 1600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반납하겠다”며 “비정규직 처우개선, 공공부문 청년 고용 확대 등 활용방안에 대해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국정기획위의 박광온 대변인은 “사회적 대타협의 첫출발”이라고 평가한다. 공공부문의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고 민간 영역으로도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현을 정은주 윤형중 기자 goloke@hani.co.kr

실패한 정부 정책 ⇒ 공익 목적 사업

- 공공연대기금 제안 취지
 -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 내용과 절차 모두 문제투성이 ⇒ 대표적 노동적폐
 - 정부 2017.6.16.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 사실상 폐기 결정
 - 잘못된 정책 강행 과정에서 활용된 인센티브도 부당
 - 공익 목적사업에 활용기로 결정
- 공공연대기금 사용방안
 - (1안)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에 일회적으로 사용
 - (2안) 공익재단 설립 통해 지속적인 사업에 활용
- 공익재단 설립 추진의 의미
 - 구조화된 노동시장의 불평등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개입의 필요성
 - 사용자, 정부의 협조 전제로 한 노동조합 주도의 사회연대 활동

공공연대기금 기본 방향 및 목적(박준형, 2017)

o 기본 방향

- 비정규직 차별해소, 좋은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
- 환수(반납) 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적 기금으로 사용
- '재단 설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 집행 및 기금 운영 방안 마련
- 공공기관 구성원, 정부(및 사용자),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

o 기금의 목적

- 공공부문 정규직, 비정규직 연대사업을 통한 사회적 차별 해소의 마중물 역할
 - 좋은 청년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차별 해소 지원
 - 비정규직, 취약소외 계층의 삶의 질 향상 위한 사회 연대
 -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 개혁 연구 및 기반 마련
- (무한경쟁 성과주의, 승자독식, 사회적 불평등 해소 및 지속가능한 공동체 발전에 기여)

공익재단 사업계획(예시)

분야	대상	사업내용	기대효과
비정규직 처우개선	비정규직 저임금층	- 공공부문 비정규직 복지격차 해소 등 처우개선 지원 -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무능력 개발 지원 -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 및 자녀 복지사업 (장학사업 등) - 노동복지연대센터 설립 및 운영 * 고충상담, 법률지원, 각종 사회보장제도 안내 등 * 혁신도시 중심 센터 설립	- 차별/격차 해소 - 조직률 제고 - 분권화 -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일자리 창출	청년 등 취약계층	- 근로시간 단축 등 통한 청년, 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 신규 청년-재직 노년 세대 상생 작업조직 지원 - 일자리 나누기 정책개발 및 사회연대 여론조성	- 일자리 창출 -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고용 및 노사관계	공공부문 전체	- 공공부문 고용관계와 임금체계 개선방안 정책 연구와 협의 지원	-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

개선		- 공공부문 교섭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 연구와 협의 지원	- 사회적 대화 활성화
역량 강화	공공부문 전체	- 공공부문 노동자 교육훈련 지원 사업(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교육 포함) - 공공부문 노동자 퇴직 후 대비 훈련/알선 지원(인생이 모작) - 사회공공성 강화 위한 노동조합의 정책역량 강화 및 정책연구 사업 지원	- 역량강화
사회공공성	국민	- 공공기관 사업의 공공성에 관한 사회적 논의 활성화 지원(예: 원전 안전성, 대중교통 공공성, 공공서비스 보편성·접근성 등)	- 사회공공성 인식 제고 - 사회통합력 제고
기타	국민	- 재단 사업 관련 대국민 공모사업 * 비정규직 및 청년 등 취약계층 일자리 관련	-참여민주주의

공익재단 설립의 의미

○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출발점

- 정부 정책 실패에 따른 부당이익의 사회화
- 성과연봉제 반대투쟁의 근거(공공성)를 반납을 통한 공익재단 설립으로 실천함
- 노동조합 역할 제고와 노사정 협치구조 마련

○ 시대정신의 실현

- 차별 및 격차 해소
- 좋은 일자리 창출
- 분권화
- 사회적 책임
- 사회공공성

공익재단 설립의 의미

o 균열일터·균열사회 극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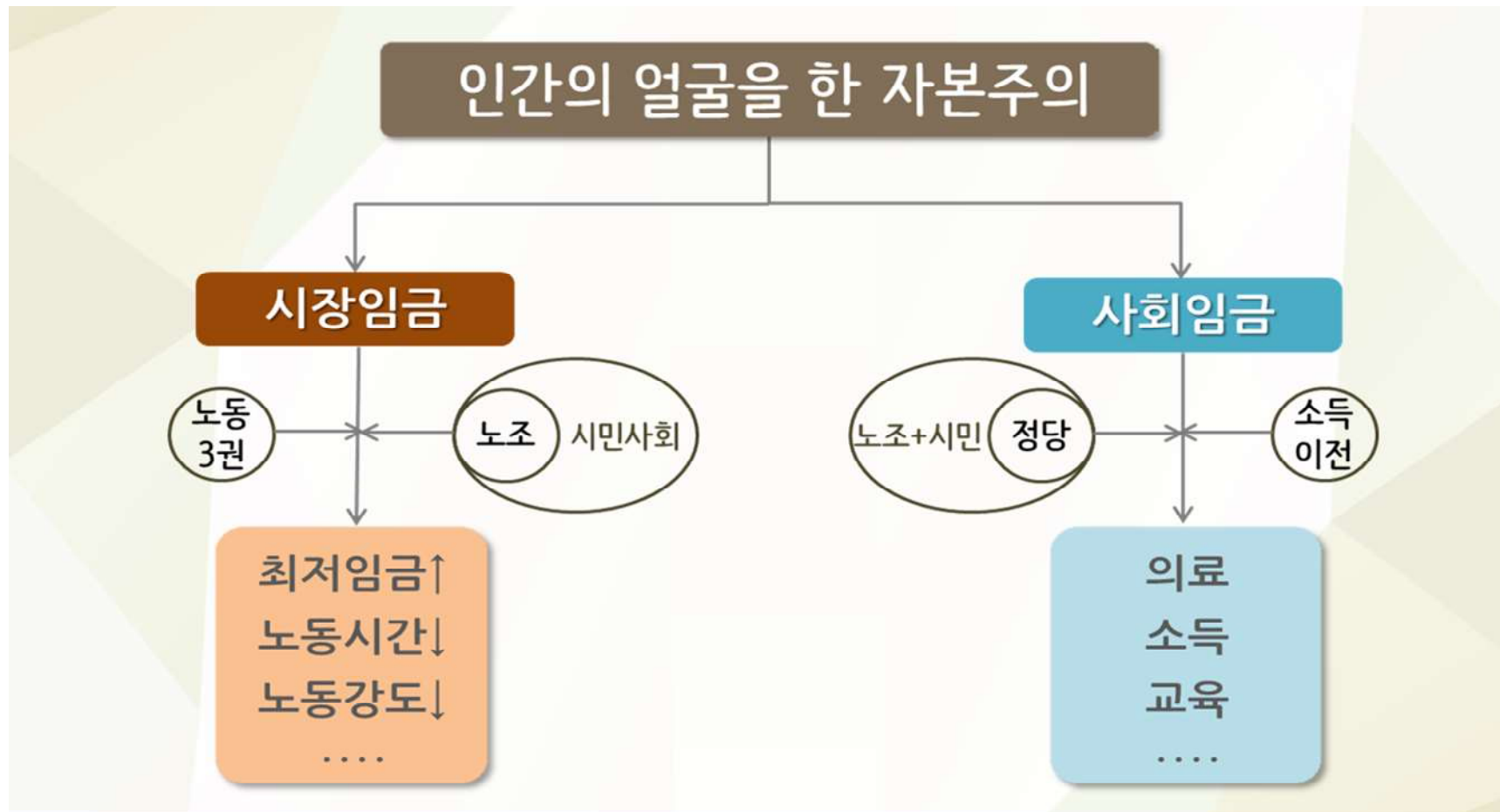
- 노동조합 운동: 특정 이익 대변 vs. 보편적 이익 대변
- 불완전한 권리의 교환: 권리의 결핍, 단기 이익 몰두(자판기 노조)
- 균열: 노동자 내부(고용형태별, 성별, 국적별 등), 조합원과 활동가, 조합원과 비조합원, 노동조합 운동과 시민운동 등

o '기업'을 넘는 노동조합, 사회와 만나는 노동조합

- 노동자 내부 임금격차, 비정규직 차별, 저임금 일자리 문제 등에 대한 노동조합 역할 천명
- 구체적인 형태로서 '기금' 조성 및 사업 집행이라는 사회적 메시지
- 새로운 유형의 연대 가능성 실천적 모색
- 고독한 노조, 함께 하는 운동: 인정은 타자로부터의 인정, 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권리의 확보
- 경제투쟁 넘어선 조합원과 시민 상대로 한 경제적·정치적 노력

o '노동존중사회' 마중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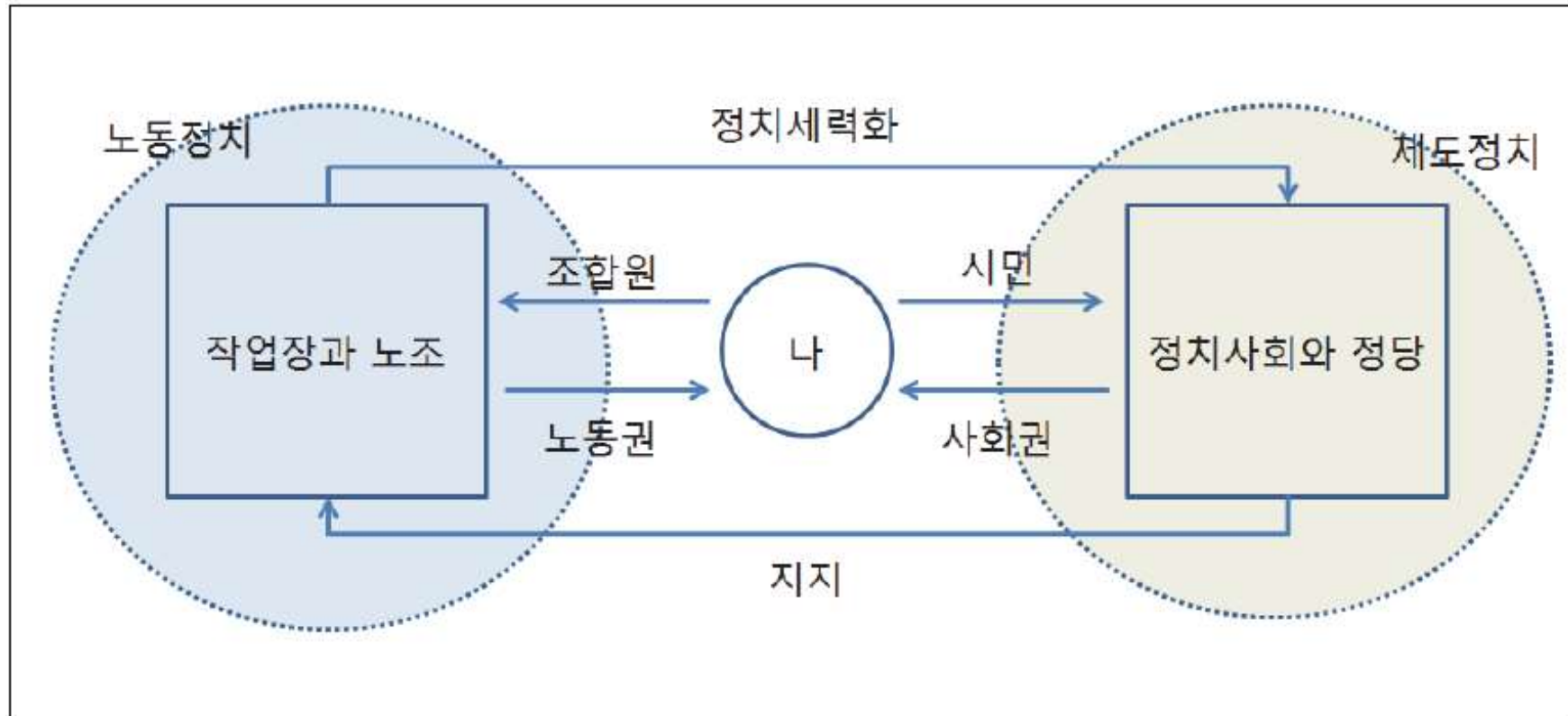
o 시장임금에서 사회임금으로



공익재단 확장성

- 공공부문에서 출발, 타 산업으로의 확장성
 - 보건의료산업, 금속산업 등
- 공익재단과 연대임금 정책
 - 지역·산업 단위 기금과 초기업 단위 협의를 마련
 - 업종·산업별 협의/교섭의 교두보
 - 지역·산업 발전기금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회화
- 노동조합 조직률 제고

노동조합 운동 - (공익재단) - 사회 운동



자료: 유범상(2017)

공익재단 기대효과와 노동존중사회

- 격차해소
- 일자리 창출
- 사회적 대화 활성화
- 조직률 제고
- 단체협약 적용률 제고
-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

6

10%에 불과한 노조가입율과 단협적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여 “노동존중사회”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10%에 불과한 노동조합 가입율과 단협적용률을 더욱 높이기 위해 법·제도 개선 추진

■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

- ◆ 특수고용노동자, 실직자·구직자 등 노동기본권 보장
- ◆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교섭창구단일화제도 개선방안 마련
- ◆ 신별교섭 등 초기업단위 단체교섭 촉진: 신별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 산업별 노사정대화 적극 지원
- ◆ 단체협약 적용 범위 확대 및 효력확장제도 정비
- ◆ 정당한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남용 제한

■ 노사자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정지침 폐기 및 행정지도 중단

- ◆ 박근혜정부가 시행한 공공·금융부문 성과연봉제,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변경지침’의 즉시 폐기 및 자의적 단체협약 시정 명령 등 행정지도 중단

1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만들어,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3

실노동시간 단축 등 일자리 나누기로 민간부문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습니다

6

‘시민사회 성장’을 사회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 ■ 사회변화에 조응하는 비영리·공익법인 제도 혁신 —

- 기부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시민성 강화를 위한 자원봉사 정책 개선
- 자율적인 민주시민 교육 확대

정부의 역할

o 정부 정책 실패 인정

- 성과연봉제 평가 항목 폐지 등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의결(17.7.31.)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일지 자료:기획재정부 등

2016년 1월 정부, 성과연봉제 대상을 비간부직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성과연봉제 권고안' 확정

3월 한국마사회 등 성과연봉제 도입

5월 정부,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선정해 인센티브 부여하기로 결정

6월 120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발표

9월 코레일 노조, 성과연봉제 철회 역대 최장기 파업 돌입(74일간)

12월 정부, 한전·동서발전 등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5곳 선정

2017년 1월 대전지법, 코레일 등 5개 노조의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2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성과연봉제 일률적 도입 반대"

5월 서울중앙지법,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노조합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 무효 판결

6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성과연봉제 권고안 폐기 여부 결정

정부의 역할

o 노동존중사회 '마중물'로서 공익재단 역할과 필요성 강조

- 제안된 공익재단이 실패한 정부 정책에 따른 인센티브 반납을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출발하는 것인 만큼 기금 조성 및 운영과정에서 노사정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함
- 재단 설립의 목적이 임금격차 해소, 비정규직 차별 해소, 일자리 창출 등에 있는 만큼 특히 정부는 고유 정책행위와 병행하여 재단 설립 및 운영을 지지, 지원할 필요가 있음

o 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원

- 인센티브 반납분으로 출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안정적 기금 확보 방안 중요
- 출발은 성과연봉제 도입 120개 공공기관 ⇒ 타 공공기관으로의 확장
- 기금 조성과정 적극 지원: 공익재단 기금 출연과 경영평가 연동
 - * 사회적 가치 및 사회적 책임 등의 지표
 - *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의 지표
- 이를 통한 공익재단 참여 확대 유인 제공

사례1: 공공기관 사회공헌사업과 정부 역할

○ 사회공헌사업 현황(이재훈 외, 2017)

- 126개 기관(전체 공공기관의 39.2%) 총 2,119억원

○ 주요 사업 및 특징

- 사회복지기관 지원,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 공익행사 사업 지원, 장학지원, 성금 및 기부 등
- 기관 스스로 주체가 되기보다 외부기관에 대한 기부와 사업 위탁 중심

○ 사회공헌사업 활성화 요인 분석

- 중앙정부의 정책: 2011.3. '공공기관의 공정한 사회 실천방안' 사회공헌활동 적극 수행 주문
- 경영실적 평가 편람과의 연동: 기획재정부 2011.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편람에 기관의 설립목적과 업무 특성에 맞는 사회 봉사활동 수행 및 사회적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과 실적 평가하기 위해 사회공헌지표 추가하였음.

⇒ **결론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지침과 경영평가의 연동이**

공공기관 사회공헌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사례2: 타 공익재단 자원 조달 방식

o 공익재단 자원조달 방식

- 정부지원 의존: 국고지원, 보조금, 위탁사업 수행 등(노사발전재단 등)
- 자체조달: 대중적 모금, 기업지원금, 후원자 기금 등(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함께일하는재단 등)
- 매칭펀드: 정부지원과 자체조달 병행(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

o 공익재단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사례: 민관공동 R&D펀드(김주일 외, 2014)

- 대기업을 기술개발 위한 자금 출연시 정부가 일정비율 금액 지원
- 대기업을 출연한 자금에 대해 기부금 처리 통해 참여 유인 제공

마치며

○ 공익재단 출범의 의미

- 그동안 공론화 과정만 거쳤던 연대기금 '첫 삽'
- 불평등, 격차,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등 현안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공동 노력
- 기업 내 정규직 중심 노동조합 운동 ⇒ (지역·시민) 사회운동으로의 확장
-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 정부의 역할

- '노동존중사회' 마중물로서 재단 출범의 필요성과 공동의 노력 강조
- 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원: **경영평가 반영 적극 검토**
 - * 1,600억원 기금 조성 지원
 - * 120개 이외의 공공기관의 확대 출연 및 참여 지원
 - * 기금 지속성을 위한 추가 출연 및 활성화 지원

토론문

.....

- 한창규 (양대노총 공공 공대위 집행위원장)
- 류경희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
-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토론문



한창규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 집행위원장)

발제자들께서 제시해주신 사회연대의 필요성, 그리고 이번 (가)공공상생연대기금의 의미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합니다. 발제하신 내용 중에서 특히 강조할 부분, 기금의 의미를 잘 살리기 위한 필요 조건 등에 대해 노동조합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기금 제안 경과

-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는 성과연봉제 폐지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면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조기도입 및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급에도 반대해왔음. (성과연봉제 도입 인센티브 = “독이 든 사과”)
- 지난해 박근혜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강행도입하면서, 노사합의가 없었던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100% 도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모든 기관에 도입 인센티브 지급(일부기관에는 조기도입 인센티브 및 우수기관 인센티브까지 추가 지급), 이 총 금액이 약 1600억원 이상에 이름.
- 2016년 투쟁과정에서 양대노총 공대위에 함께한 성과연봉제 거부 노동조합들은 인센티브 반납운동을 전개하였음. (각 노조별로 자체 계좌에 반납하고 사측에 반납 통보하거나 반납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방식)
-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는 올해 들어 성과연봉제 폐지가 가시화되면서, 성과연봉제 도입과 연계된 인센티브를 정부가 모두 환수할 것을 요구하고 노동조합도 반납 결의를 다시 확인함.

□ (가칭) ‘공공연대기금’ 제안 취지와 의미

- 성과연봉제는 공공성을 훼손하는 잘못된 정책으로서, 이를 강행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부당함. 따라서 제도 폐지와 함께 소멸되는 것이 수순일 것임.
- 그러나 이미 지출된 인센티브를 불법행위를 자행한 사용자, 이를 압박한 정부에 반

납하여 처분을 맡기기보다는,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와 처우개선, 청년 실업 해소와 같은 공익적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 정부가 노사, 노정 합의가 필요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했던 역사를 청산하고, 향후 공공부문에서 민주적인 노정, 노사 관계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을 함께 실천적으로 선언하는 의미가 있음.
- 기금 마련은 발제자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공공부문 노동운동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연대에 (선언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에 나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또한 이를 통해 공공부문 노동운동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전체를 대변하고,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와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기풍 확산시킬 것임.

□ 기금의 지속 출연, 유지 운영을 위한 조건

- 공익재단 설립 후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지속적 출연이 필요하고, 특히 노동자들이 우선 출연한 만큼 정부와 사용자의 이에 상응하는 기여 필요함.
- 공공기관 노동자들도 지속가능한 기금의 유지,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음.
- 사용자는 우선 인센티브(기금) 거출에 적극 협조하는 것은 물론, 이후 경영평가 성과 급지급 후 기존 사회공헌활동 중 일부를 재단에 출연하는 방안 등 검토가 필요함.
- 정부는 공익재단 설립 및 기금운영 지원, 각 공공기관 및 노조의 출연 과정에 대한 관리와 지원 역할 필요함. 특히 애초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지급된 인센티브인 만큼 환수 조치를 정부가 책임있게 추진해야할 것임.

* 지난 정부에서 각 공공기관 사용자에게 대해 노사, 노정 합의없는 불법 지침도 강행한 정부가 인센티브 성과급 반납 촉진 조치에 미온적인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움.

-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국회의원으로 입법 발의했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기본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음. 이번 기금을 통한 활동은 대표적으로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기금의 지속적인 출연, 발전을 위해 각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기금 출연과 함께 이후 사회공헌기금 등을 출연할 경우, 경영평가의 관련 지표에 반영하는 등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 사용자, 정부에 대한 당부

- 정부 일각에서도 인센티브 반납이 성과연봉제 도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

에서 부담스러워하는 흐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폐기하는 것이 새 정부의 적폐 청산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임.

- 사용자도 성과연봉제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불씨를 유지하려는 공공기관도 있음. 그러나 이미 정책의 실패가 명확하고 폐지가 확정된 만큼 조속히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특히 인센티브 반납에 대해서도 일부 기관 사용자들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도 있으나, 노사합의로 폐지할 경우 당연히 인센티브를 반납하는 행정적인 조치를 포함해 적극 협조해야 함.

- 인센티브 반납과 (가칭) ‘공공상생연대기금’ 설치, 공익재단 설립 등 일련의 사업은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가능. 일부 보수언론의 비난은 근거가 없기는 하나, 이번 기금조성 과정의 초유의 일이라는 점에서 어려운 것은 사실이며, 치밀한 준비를 통해 성공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음.

□ 기금을 통한 사업 방향

-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구직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함.

- 지역사회와 연대하기 위해 지방이전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노동자, 시민에 개방된 사업 추진하겠음.(혁신도시 시즌2 사업과 연계)

- 공공성 강화,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정상화 등을 위한 정책 개발을 통해 공공기관의 올바른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함.

- 이러한 사업에 기금을 적극 활용하고자 하나, 독자적으로는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지속적인 기금 확충 방안 및 정부·지자체, 공공기관과 매칭하는 사업 등을 통해 사회공공적 사업의 확산을 도모하겠음.

□ 기금의 지속적 발전의 조건으로 노정교섭(정책협의) 발전

① 기금 조성 및 운영 자체와 관련된 협의

- 기금 조성 과정에서 각 공공기관 노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사정 차원의 공동 노력(사업) 전개 필요함.

- 기금 설치 이후, 공익재단 설치 시 재단 이사로 노·정이 함께 참여하여 운영 방안을 협의하고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임. (노조는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

위 차원에서 참여, 정부도 관계부처 장관 참여 필요)

②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 및 공공부문 운영(개혁)에 대한 노사정 대화, 노정 교섭으로 이어져야함

- 이번 기금 조성 자체는 ‘마중물’에 불과하며, 제한적인 기금으로는 한계가 있음.
- 기금 운영 자체는 물론 기금 조성의 취지인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실현(비정규직 정규직화, 처우개선,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노사정 협의가 반드시 이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 공공기관의 사용자로서 정부와 노동조합의 교섭(노정교섭) 병행 발전이 반드시 필요함.

□ 향후 과제

- 기금 마련의 취지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처우개선, 청년 일자리 확대이지만 이는 일부기금으로 가능한 것이 아님은 분명함. (예를 들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처우 개선은 기금활용 이전에 정부와 사용자의 책임인 것임). 따라서 애초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을 노사정 협의 및 노정교섭을 통해 제대로 마련해야할 것임.
- 이러한 좋은 일자리 확대 과제는 공공부문만의 문제는 아님.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라도 재벌 대기업과 자산소득계층에 대한 증세를 통한 공공재원 확대가 필요하며, 더 큰 효과가 있는 민간부문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도 재벌 대기업의 역할이 필요하고, 따라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함.
-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기업(특히 재벌)이 나서야한다는 것은 당연한 전제임. 산술적으로 계산해보아도 정규직 노동자들의 성과급 일부 출연 혹은 임금인상 일부 억제 그 자체로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끌어올리기 충분치 않음. 따라서 노동자들의 이러한 노력이 정부와 사용자의 실질적인 기여로 더욱 확산되어야 할 것임.

토론문



류경희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

공공연대기금의 의의와 발전방안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노동계의 사회연대 논의에 대한 기대

- 노동계를 중심으로 사회연대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노동시장의 구조적 격차와 이로 인한 노동자 내부 균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전향적인 일.
- 특히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공공연대기금’은 노동조합이 실질적 재원을 토대로 사업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한걸음 진전된 단계.
- 이전에 노동조합 내부에서 진행된 ‘사회연대’ 논의가 ‘정규직 양보론’에 대한 우려 등으로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경험을 거울로 삼아, 이번에는 사회연대 가치를 구현하는 의미있는 사업으로 발전하기 바람.

공공연대기금의 위상: 지속적 사업

- 공공연대기금은 노동조합의 사회연대 사업의 상징으로 자리잡을 필요가 있음. 이러한 취지에서 일회적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음.
- 이에 ‘사회연대’ 가치가 지속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상시사업’ 체계로 추진될 필요. 이러한 면에서 공익재단은 적절한 대안.

재원방안: 다양한 모델 가능

- 공공연대기금의 사회연대성은 기금의 사용과정 뿐만 아니라 재원마련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구현되는 게 바람직. 이에 인센티브 반환금을 종잣돈으로 삼되 정례적인 수입 방안이 마련돼야(기금운용 수입은 별도).
- 향후 재원방안은 노동조합(개별 노동자 기여 포함)만 참여하는 단독모델, 노사가 함께 출연하는 노사모델, 정부 지원금도 추가되는 노사정모델이 모두 논의 가능. 세 모델 모두 열린 논의 필요.

거버넌스: 노동조합 주도성

- 공공연대기금의 핵심 목표가 노동조합(노동자)의 사회연대 가치 구현이라면, 공익재단 운영에서는 노동조합의 주도성이 확립돼야.
- 기업, 정부도 재원을 출연할 경우 일부 참여할 수 있겠지만, (혹 동일 지분을 출연하더라도) 운영체계에선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체계가 바람직.
- 또한 기금 운영과정의 투명성, 민주성, 위험 관리 등을 위해선 다양한 노동계층, 시민사회, 언론 등이 참여가 보장돼야.

사업 내용: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영역 개발

- 노동조합의 사회연대 사업은 불안정 노동계층의 권리 증진, 노동조합과 지역사회의 관계망 형성, 노동조합의 사회연대 역량 강화 등 다양. 모두 노동자 내부 연대의 강화와 노동조합의 사회적 시민권을 강화하는 데 일조할 것. 발표문에서 제시된 사업의 사례들이 모두 논의 가능.
- 그럼에도 현재 비슷한 취지로 중앙정부, 지자체가 벌이는 사업들이 존재. 중앙정보의 고용보험사업, 지자체의 노동권리(복지)사업 등. 노동조합의 사회연대성이 부각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자체가 직접 주관하기 어려운 사업에 집중하는 게 적절.
- 이에 고용노동부 예산사업, 고용보험/산재보험기금, 지자체 노동권리사업 등이 추진하기 어려운 영역을 개발하는 기획이 중요. 예를 들면, 불안정노동자 권리 지원 및 복지사업, 노동자학교, 노동자 퇴직 준비 활동, 노동역사 정리(혹은 노동역사관), 노동정책연구(혹은 노동연구센터) 등.

향후 발전 방향: 사회연대 노동조합주의

- 이후 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 등 여러 산별에서 비슷한 취지의 기금 활동이 논의되리라 기대함. 공공부문 노동조합에서 공공연대기금이 하나의 ‘모델’로 자리잡기 바람. 이후 다른 산별의 연대기금 사업이 추진되면 전국적 연대기금 사업체계를 갖출 수도 있을 것.
- 또한 ‘특정 재원’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연대 사업의 한계도 인식해야. 노동조합의 사회연대는 노사관계 체계 내부에서 진행되는 게 최상. 전형적인 모델은 스

웨덴의 연대임금체계.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논란이 생기더라도)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적극적인 열린 논의가 필요. 예를 들면, 노동자 내부 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한국형 연대임금체계(예: 최저임금 연동 인상, 정액인상 등). 노사 고용보험료 인상을 통해 불안정 노동자 보험료를 지원하고 급여를 강화하는 ‘고용보험연대’, 정년연장과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선 ‘노동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의 완전 구현을 위한 건강보험료 인상, 복지국가 재정 마련을 위한 (누진적) 사회복지세 도입 등.

- 이렇수록 노동조합의 사회연대 활동 영역은 넓어지고, 노동조합의 시민권도 공고화될 것. 이러한 활동이 성과가 쌓이면, 현재의 불안정 노동시장체제에서 한국 노동조합(운동)이 나아가는 새로운 노선 정립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 예를 들면, 사회연대 노동조합주의.

MEMO

[illegible]